



지 방 보 조 금 특 정 감 사 결 과



감사위원회

지 방 보 조 금 특 정 감 사 결 과

I 감사개요

- 감사종류: 재무감사
- 감사대상: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C등급 이하 보조사업(88건)
 - 관련부서: 투자유치과 외 19개 부서
- 감사기간: 2023. 4. 3. ~ 5. 30. (31일간)
- 감사범위: 2019 ~ 2021 성과평과 C등급 이하 지방보조사업
- 감사인원: 회계감사팀장 외 2인
- 감사중점: 보조금 등 예산 회계 및 업무 처리 전반
- 실시근거
 - 「아산시 자체감사 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3조(감사의 종류 등)

II 감사결과

□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건, 원)

합 계			변상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인원)		주의 (인원)
건수	금액	인원					
8	2,415,900	-	-	-	3 (2,415,900)		5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조치
			-	-	-	-	-

Ⅲ 처분요구사항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지 적 사 항	행정상	재정상(원)		비고
			조치	금 액	
계		계 8 시정 3 주의 5	계 회수 추급 추징 반환 기타	2415,900 2,206,950 208,950	
1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	시정	회수	1,088,440	
2	퇴직금, 급여 지급 부적정 및 정산검사 소홀	시정 주의	회수 추급	418,510 208,950	
3	민간단체 차량 구입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	회수	700,000	
4	보조금 식비 집행 부적정	주의			
5	지원사업 수입금 처리 업무 소홀	주의			
6	지원사업 강사료 원천징수 미실시	주의			
7	지원사업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소홀	주의			

2. 현지처분사항 일람표

(단위: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금액
계	해당없음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

【부 서 명】 문화예술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회 수

【지적내용】

가. 현 황

○ 2019년도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표1】

단 체 명		교부액(천원) (자부담포함)	정 산 일	사 업 내 용	비 고
단 체 명	대 표				
■■■■■	■■■	12,700	2019.12.20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건비 보조	
■■■■■	■■■	5,500	2019.12.22.	찾아가는 경로당 요양원 문화예술공연	
■■■■■■■■■■■	■■■	11,000	2019.12.20.	■■■■■	
■■■■■	■■■	5,500	2019.12.20.	서예작품 전시회 (인쇄비 등)	
■■■	■■■	6,100	2019.12.20.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연극공연	
■■■■■■■■■■■	■■■	11,000	2020.02.26.	■■■■■	
■■■■■■■■■■■	■■■	5,500	2019.12.20.	■■■■■합창단 정기공연	
■■■■■■■■■■■	■■■	5,070	2019.12.20.	타악공연(출연료,음향)	
■■■■■■■■■■■	■■■	3,500	2019.12.20.	■■■■■ 전시회	
■■■	■■■	8,250	2020.01.16.	■■■■■ 산사음악회	
■■■■■■■■■■■	■■■	6,160	2019.12.20.	■■■■■ 관광열차	
■■■■■■■■■■■	■■■	5,684	2019.12.20.	서예 전시회	
■■■■■■■■■■■	■■■	5,500	2019.12.22.	서예 전시회	
■■■■■■■■■■■	■■■	3,660	2019.12.20.	국악, 문인화, 다도 퍼포먼스	
■■■■■■■■■■■	■■■	5,500	2020.04.06.	찾아가는 음악회	
■■■■■■■■■■■	■■■	22,200	2019.12.31.	찾아가는 음악회	

■■■■■	■■■	5,800	2019.12.20.	■■■■■ 국악공연
■■■■■	■■■	3,500	2020.03.06.	이웃 사랑 나눔 음악회
■■■■■	■■■	2,200	2020.03.31.	창극 ■■■■
■■■■■	■■■	3,300	2019.12.22.	전통 문화예술(노적거리, 지신뵈기)
■■■■■	■■■	21,400	2019.12.20.	전국 서예 공모 및 전시
■■■■■	■■■	5,551	2020.02.07.	국악 공연(출연, 음향비)
■■■■■	■■■	4,500	2020.05.11.	생활 예술 전시회
■■■■■	■■■	11,200	2019.10.28.	댄스 경연대회(심사, 홍보비)
■■■■■	■■■	6,000	2020.02.03.	■■■■■ 노래하는 삶 콘서트
■■■■■	■■■	12,100	2019.12.22.	■■■■■ 기념 시조 발표회
■■■■■	■■■	9,020	2019.12.20.	■■■■■
■■■■■	■■■	6,930	2020.01.16.	오페라 및 뮤지컬 공연
■■■■■	■■■	4,500	2019.12.20.	사물놀이 공연

나. 관련 규정

- 「지방보조금법」 제13조 및 제14조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보조금법」 제1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아산시 보조금 관리 업무 매뉴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아산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법 · 부당사항

□ []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 정산 부적정

- [](대표 [])는 「[]」 송모 기념 전국 정가, 창극 국악공연을 2019. 9. 28. 「신정호 야외음악당」에서 개최

■ [총사업비 12,100천원(보조금 11,000천원 / 자부담 1,100천원)]

- 「아산시 지방보조금 업무매뉴얼」 “지방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도와 사용(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 본 보조사업 행사일 (2019. 9. 28.)이 완료된 2019. 10. 1. 자부담 부분으로 식비(984,000원), 숙박비(120,000원)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식비의 경우 참석자 명단을 미첨부한 사실이 있으며, 국악공연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증빙자료인 사진 등을 미첨부한 사실이 있음.

※ $12,100,000 - 10,996,000 = 1,104,000 \times 90\% = 993,600\text{원}$

(총사업비 - 집행액) = (잔액 × 보조율) = 정산착오금액

□ [redacted]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 정산 부적정

- [redacted](대표 [redacted])는 「[redacted]」을 2019. 5. 11. “여성회관”에서 개최

■ [총사업비 5,800천원(보조금 5,000천원 / 자부담 800천원)]

- 「아산시 지방보조금 업무매뉴얼」 “지방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 지침」에 의거하여 “인건비는 단체(참여단체 포함)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은 당사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용도와 사용(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redacted]는 본 보조사업 행사일(2019. 5. 11.)이 완료된 2019. 10. 1. 자부담 부분으로 식비(700,000원)를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국악공연과 관련된 출연료는 단체별로 지급시 단체 내에서 개인별로 지급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각 단체별 대표자에게 출연료를 일괄 지급한 사실이 있음.

$$\text{※ } 5,800,000\text{원} - 5,100,000\text{원} = 700,000\text{원} \times 86\% = 602,000\text{원}$$

$$(\text{총사업비} - \text{집행액}) = (\text{잔액} \times \text{보조율}) = \text{정산착오금액}$$

□ [redacted]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 정산 부적정

- [redacted](대표 [redacted])는 「[redacted]」를 2019. 5. 11.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개최

■ [총사업비 6,000천원(보조금 5,000천원 / 자부담 1,000천원)]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 제1항(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보조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기준 제15조 제6항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 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본 보조사업 교부신청시 보조금(5,000,000원), 자부담(1,000,000원)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조금 정산시 자부담(509,500원)을 집행,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text{※ } 6,000,000\text{원} - 5,509,500\text{원} = 490,500\text{원} \times 83.3\% = 408,580\text{원}$$

$$(\text{총사업비} - \text{집행액}) = (\text{잔액} \times \text{보조율}) = \text{정산착오금액}$$

- 또한 2020. 1. 16. “ ” 본 공연의 음향장비(500,000원)를 임대차 계약 없이 지출결의를 한 사실이 있음.

□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 정산 부적정

- (대표)은 「 」를 2019년도 4월 ~ 11월까지 매월2회(총16회) “효담실버요양원”, “설화요양병원”, “이화피닉스요양병원”, “하안민들레요양원”에서 사랑나눔콘서트를 개최

■ [총사업비 5,521,000원(보조금 5,000,855원 / 자부담 520,145원)]

-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정산 보고서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정산 시 지출과 관련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홍보용 베너(음악회 비치용 2개)와 관련된 증빙자료(사진 등) 없이 정산보고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 또한,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득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집행하여준 사실이 있음.

□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 정산 부적정

- (대표)은 「 공연」를 2019. 5. 12. “외암민속마을 상설무대” 공연을 개최

■ [총사업비5,070천원(보조금 4,000천원 / 자부담 1,070천원)]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인건비는 단체(참여단체 포함)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은 당사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조사업 공연과 관련된 출연료를 단체별로 지급 시 단체 내에서 개인별로 지급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각 단체별 대표자에게 출연료를 일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 정산 부적정]

- [대표 ()]는 「()」를 2019. 3. 2. ~ 3. 3.까지 「아산시 평생학습관」에서 행사를 개최

■ [총사업비 3,500천원(보조금 3,000천원 / 자부담 500천원)]

- 「아산시 지방보조금 매뉴얼」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에 의하면 현수막의 경우에는 m²당 7,000원(세금포함)이하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리고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수수료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아산시 지방보조금 업무매뉴얼」 “지방보조금의 용도의 사용금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도의 사용(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현수막 1매당 75,000원(수량 19개) 총1,425,000원(견적서 미첨부)으로 제작하여 게재하였으나, 「아산시 지방보조금 매뉴얼」 및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681,950원 이하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743,050원을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단위 : 원)

구 분	홍보 현수막 등 집행금액			일반게시대 게첨 정당금액(1주게첨)			행정게시대 게첨 정당금액(2주게첨)			게시대 미게첨 정당금액			과다금액 (A-B-C-D)
	계(A)	수량	계약 단가	계(B)	수량	정당단가	계(C)	수량	단가	계(D)	수량	단가	
현수막	1,425,000	19	75,000	489,450	13	37,650	138,600	4	34,650	53,900	2	26,950	743,050
배 너	90,000	3	30,000										0

※ 일반게시대 게첨장소: []아파트, [], [], [], [], [], [], [], []아파트, []

※ 행정게시대 게첨장소: [], [], [](2곳)

※ 게시대 미게첨 장소: [] 내부, [] 부근(임야지)

⇒ 현수막(게시대용) 5.5m(가로) × 0.7m(세로) = 3.85㎡(26,950원)

일반게시대(증지비용 3,000원) / 행정게시대(증지비용 3,000원)

게시 및 철거비용: 일반게시대(1주일 7,700원)/행정게시대(2주일 7,700원)

⇒ 행정게시대(2주) 게시비용: 제작비(26,950원)+게시및철거비(7,700원) = 34,650원

일반게시대(1주) 게시비용: 제작비(26,950원)+증지비(3,000원)+게시및철거비(7,700원) = 37,650원

일반게시대(2주) 게시비용: 제작비(26,950원)+증지비(3,000원)+게시및철거비(15,400원) = 45,350원

※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 관련 수수료 기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비 등 징수 기준(제26조제5항 관련)

설치비 등 구분	수수료
가. 일반게시대 게시 및 철거	7,000원 <게시기간은 1주일 기준>
나. 행정게시대 게시 및 철거	7,000원 <게시기간은 2주일 기준>

- 또한, 보조사업 행사일(2019. 3. 2~ 3)이 완료된 2019. 3. 6. 자부담 부분으로 식비(500,000원)를 참석자 명단을 미첨부 한 채로 정산한 사실이 있음.

$$\text{※ } 3,500,000\text{원} - 3,000,000\text{원} = 500,000\text{원} \times 86\% = 430,000\text{원}$$

$$(\text{총사업비} - \text{집행액}) = (\text{잔액} \times \text{보조율}) = \text{정산착오금액}$$

□ [] 문화예술행사지원 사업 정산 부적정

- [] (대표 [])는 「[]」을 2019. 4. 6. 아산시 곡교천 “은행나무길”에서 개최

▣ [총사업비 11,000천원(보조금 10,000천원 / 자부담 1,000천원)]

- 「법인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임의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게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하고, 수익사업이 개시가 되면 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가 된다. 따라서, 비영리 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하려고 하면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사업을 개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보조사업자 []의 경우 문화예술행사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고유번호증)”과 무대장치, 소품 등 4,000천원 임차하여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시 “적정”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음.

□ [] 문화예술행사지원 사업 정산 부적정

- [] (대표 [])은 「[]」문화예술 공연」을 2019년 6월 ~ 12월까지 아산시 관내에서 개최

▣ [총사업비 5,500천원(보조금 5,000천원 / 자부담 500천원)]

- 「아산시 지방보조금 업무매뉴얼」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보고시 제출 서류는 보조사업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 등 4건에 대하여 증빙서류 없이 제출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 “적정” 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음.

[문화예술공연]

일시	장소	보조금 지출액	지출일	증빙 여부	비고
합계		5,500,000			
현수막		50,000	6.14.	X	
2019.6.13.	 요양원	545,000	6.13.	X	악기운반 100,000×10 =1,000천원 출연료 145,000×10 = 1,450천원 음향임차 300,000×10 =3,000천원 현수막 500천원
2019.6.20.	 요양원	545,000	6.20.	X	
2019.7.10.	 요양원	545,000	7.10.	○	
2019.7.12.	 경로당	545,000	7.12.	X	
2019.7.17.	 경로당	545,000	7.17.	○	
2019.7.23.	 경로당	545,000	7.23.	○	
2019.8.13.	 경로당	545,000	8.13.	○	
2019.8.16.	 경로당	545,000	8.16.	○	
2019.9.10.	 경로당	545,000	9.10.	X	
2019.9.19.	 요양원	545,000	9.20.	○	

□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 정산 부적정

- (대표)는 「」를 2019. 9. 5. ~ 27.까지 “아산시 평생학습관” 및 신정호 야외음악당에서 개최

▣ [총사업비 11,500천원(보조금 10,000천원/자부담 1,500천원)]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 1항(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기준 제15조 제6항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 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조사업 교부신청시 보조금(10,000,000원), 자부담(1,500,000원)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조금 정산 시 자부담(1,000,000원) 집행,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ast 11,500,000 - 11,000,000 = 500,000 \times 87\% = 435,000\text{원}$$

(총사업비 - 집행액) = (잔액 × 보조율) = 정산 착오금액

□ [redacted]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 정산 부적정

- [redacted](단장 [redacted])는 「[redacted]」를 2019. 5. 17. “아산시 평생학습관”에서 개최

■ [총사업비 12,700천원(보조금 10,000천원 / 자부담 2,700천원)]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 제1항(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기준 제15조 제6항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 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조사업 교부신청시 보조금(10,000,000원), 자부담(2,700,000원)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조금 정산 시 자부담(2,050,980원) 집행,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ast 12,700,000 - 12,050,980 = 649,020 \times 78.7\% = 510,770\text{원}$$

(총사업비 - 집행액) = (잔액 × 보조율) = 정산 착오금액

□ [redacted]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 정산 부적정

- [redacted](대표 [redacted])는 「[redacted]」를 2019. 6. ~ 12.까지 8회에 걸쳐 “아산시 관내”에서 개최

■ [총사업비 22,200천원(보조금 20,000천원 / 자부담 2,200천원)]

- 「아산시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용도와 사용(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그리고,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관리에서도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자부담도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redacted] 문화예술공연”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집행한 급식비 및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급식비(관외분), 보조사업 출장여비와 상관없는 교통비 및 주유비 지급으로 자부담 부분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자부담 집행내역

○ 급식비 집행내역(관외지역 불인정-675,050원)

구 분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금액(원)	비 고
계			1,519,550	
급식비	2019.5.15.	천안([redacted])	122,000	보조금교부일전(관외불인정)
급식비	2019.6.12.(13:26)	음봉([redacted])	82,000	
급식비	2019.6.19.(12:35)	음봉([redacted])	114,000	
급식비	2019.7.10.(13:20)	천안([redacted])	119,200	
급식비	2019.9.11.(13:25)	천안([redacted])	111,200	
급식비	2019.9.25.(13:01)	아산([redacted])	125,300	
급식비	2019.11.06.(14:15)	천안([redacted])	16,500	
급식비	2019.11.14.(16:24)	경기 고양([redacted])	60,000	소주1병 포함(관외불인정)
급식비	2019.11.27.(13:01)	천안([redacted])	134,100	

급식비	2019.12.11.(13:26)	■■■■■■■■■■	142,200	
급식비	2019.12.06.(20:49)	■■■■■■	93,050	(관외 불인정)
급식비	2019.12.16.(14:42)	■■■■■■■■■■	400,000	(관외 불인정)

○ 교통비 집행내역(전체 불인정)

구 분	날짜	지급액(원)	교통편(ktx)	비 고
		316,900		
교통비	2019.6.12.(08:20)	19,200	용산⇒아산	2019.6.3.발매
교통비	2019.6.12.(14:22)	15,800	아산⇒용산	2019.6.3. 발매
교통비	2019.6.19.(08:20)	19,200	용산⇒아산	2019.6.17.발매
교통비	2019.6.19.(14:22)	17,100	아산⇒용산	2019.6.17.발매
교통비	2019.7.10.(08:20)	19,200	용산⇒아산	2019.6.29. 발매
교통비	2019.7.10.(14:22)	15,800	아산⇒용산	2019.6.29. 발매
교통비	2019.8.28.(14:55)	16,500	용산⇒아산	2019.7.30. 발매
교통비	2019.8.28.(21:50)	19,200	아산⇒용산	2019.7.30. 발매
교통비	2019.9.11.(08:20)	19,200	용산⇒아산	2019.8.21. 발매
교통비	2019.9.11.(14:22)	19,200	아산⇒용산	2019.8.21.발매
교통비	2019.8.25.(08:20)	19,200	용산⇒아산	2019.8.25. 발매
교통비	2019.8.25.(14:22)	15,100	아산⇒용산	2019.8.25. 발매
교통비	2019.11.6.(10:55)	17,100	용산⇒아산	2019.10.06. 발매
교통비	2019.11.6.(15:19)	16,500	아산⇒용산	2019.10.6. 발매
교통비	2019.11.27.(08:20)	19,200	용산⇒아산	2019.10.29. 발매
교통비	2019.11.27.(14:22)	15,100	아산⇒용산	2019.10.29. 발매
교통비	2019.12.11.(08:20)	19,200	용산⇒아산	2019.11.26. 발매
교통비	2019.12.11.(14:22)	15,100	아산⇒용산	2019.11.26. 발매

○ 주유비 집행내역(전체 불인정)

구 분	날짜	지급액(원)	주유소	비 고
		216,220		
주유비	2019.8.3.(9:58)	60,000	■■■■■	경기 화성시 소재
주유비	2019.12.4.(18:03)	93,000	■■■■■	서울 서초구 소재
주유비	2019.12.17.(11:18)	63,220	■■■■■	서울 용산구

※ $22,200,000 - 20,991,830 = 1,208,170 \times 90.09\% = 1,088,440\text{원}$

(총사업비-집행액) = (자부담 불인정액 × 보조율) = 정산 환수금액

□ ■■■■■ 문화예술행사지원 정산 부적정

- ■■■■■(대표 ■■■■■)는 「■■■■■ “■■■■■”」
를 2019. 11. 15. ~ 18.까지 “아산시 평생학습관”에서 개최

▣ [총사업비 5,500천원(보조금 5,000천원 / 자부담 500천원)]

- 「아산시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
하여야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 보조사업자
■■■■■(대표 ■■■■■)는 보조사업 주된 목적인 전통문화(서예/
서화)계승 발전하고 도모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사업과 관계없는
“■■■■■ 강사료(300천원)” 및 “다과 및 떡(825천원)” 등을 과도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정산검사 결과보고서에 정산 “적정” 의견으로
정산 검토한 사실이 있음.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서(2019. 3. 21.)]

- 사업목적: 전통문화(서예/서화) 계승발전 도모, 지역 문화예술 활동
- 사업비 집행계획

구 분	집행계획(단위: 천원)			비 고
	계	자부담	보조금	
총 계	5,500	5,000	500	

임 차 료	전시실	400	400		
인 쇄 비	도 록	1,800	1,800		
	초대장	200		200	
	현수막	200		200	
	배 너	100		100	
소모품비	액 자	1,000	1,000		
	족 자	1,800	1,800		

[보조사업비 집행계획 수정(2019. 10. 15.)]

구 분		집행계획(단위: 천원)			비 고
		계	자부담	보조금	
총 계		5,500	5,000	500	
임 차 료	전시실	150	150		
인 쇄 비	도 록	1,500	1,500		
	초대장	200	200		
	현수막	500		500	
	배 너	100	100		
소모품비	액 자	550	550		
	족 자	1,000	1,000		
	다 과	800	800		
	출연료	200	200		
	도자기	300	300		
	사 진	200	200		

[정산보고서 세부집행내역(2019. 12.)]

구 분		집행계획(단위: 천원)			비 고
		계	자부담	보조금	
총 계		5,500	5,000	500	
보조금	기타행사운영비	2,498	2,498		음료,다과,액자 등
	소모품비	162	162		종이컵 등

	인쇄비	1,700	1,700		도록,초대장,배너
	홍보광고비	220	220		현수막
	임차료	120	120		대관료
	인건비	300	300		장구난타 강사료
자부담	급식비	500	500		떡

□ ■■■ 문화예술행사지원 정산 부적정

○ ■■■(대표 ■■■)는 「■■■음악회」를 2019. 9. 21. “아산시 고성사”에서 개최

■ [총사업비 8,250천원(보조금 7,500천원 / 자부담 750천원)]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의하면 “지방보조금 지출 시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아산시 지방보조금 매뉴얼」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지침을 보면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회를 2019. 9. 21. 개최하면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2019. 7. 26. 일괄로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보조사업 진행 시 피아노 대여(715,000원), 음향기계(3,000,000원), 홍보 대형 현수막(200,000원), 팜플릿(500,000원), 보조금 집행 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채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또한 정산보고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홍보용 대형 현수막(200,000원) 증빙자료 없이 제출한 사실이 있다.

[보조금 정산내역서]

지출일자	지출 항목	지출내용	지출금액(천원)			정산 검사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8,250	7,500	750		
2019.7.26.	인건비	난타공연	250	250		적합	출연료
2019.7.26.	인건비	섹소폰	500	500		적합	출연료
2019.7.26.	임차료	대여	700	700		적합	피아노
2019.7.26.	임차료	음향장비	3,000	3,000		적합	음향장비
2019.7.26.	인건비	트롯가수	1,150	1,150		주의(과다지출)	출연료
2019.7.26.	인건비	바이올린	300	300		적합	출연료
2019.7.26.	인건비	비올라	300	300		적합	출연료
2019.7.26.	인건비	재즈피아노	300	300		적합	출연료
2019.7.26.	홍보비	현수막	200	200		적합	현수막
2019.7.26.	인건비	필로우밴드	500	500		적합	출연료
2019.7.26.	인건비	사회자	300	300		적합	출연료
2019.7.26.	홍보비	팜플렛	500		500	접합	팜플렛
2019.8.6.	급식비	출연자식사	250		250	주의(명단누락)	출연자식대

【처분요구】

문화예술과장은

- 보조사업자인 [REDACTED]에서 사업목적 추진과 관련 없이 집행된 급식비 및 교통비(주유비 포함) 1,088,440원을 회수 조치하여 주시고,
- 또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퇴직금, 급여 지급 부적정 및 정산검사 소홀

【부 서 명】 자치행정과

【행 정 상】 시 정, 주 의

【재 정 상】 회 수, 추 급

【지적내용】

가. 현 황

◇ [redacted] 근로계약 체결현황

○ 근로기간: 2019. 5. 1. ~ 2021. 7. 9.(근무일수 801일)

○ 통상임금: 75,504원(평균임금 64,822원)

○ 퇴직금 지급 내역

- (2019. 12. 20.) 1,745,150원 지급

- (2020. 12. 18.) 1,895,310원 지급

- (2021. 07. 13.) 1,121,446원 지급

○ 2021년 7월 급여지급 내역 = 976,640원(2021. 7. 13. 지급)

나. 관련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통상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 받아야 한다.

○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다. 위법·부당사항

- 퇴직급여제도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가 계속근로 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지방보조사업자인 「[REDACTED]」, 이하 “단체” 라 한다.」에서는 보조금(민간단체법정운영비)을 동 “단체”의 상근 직원인 “사무과장” [REDACTE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사유가 발생한 2021년 7월 9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해 년도 퇴직금을 정산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특히, 2019년도는 실제 근무 년수가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지급), 또한 퇴직금을 지급시에는 산출식 [1일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에 의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208,950원을 과소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퇴직 년월일인 2021년 7월 9일 퇴사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임금 418,510원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퇴직 급여금]

성명	퇴직금 지급액(A)	3개월 급여총액	1일평균 임금	1일 통상임금	정당퇴직금 (B)	추가지급액 (A-B)
■■■■■	4,761,900	5,898,820	64,822	75,504	4,970,850	208,950

※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75,504원) × 30일 × (801일 / 365일)

※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계산식

- 통상임금: 급여액(기본급) + 고정수당(급량비) + 상여금(600,000원)
(1,822,480원 + 100,000원 + 50,000원[상여금600,000원1/12]=1,972,480원)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최저임금 8,720원]
1,972,480원 ÷ 209시간 = 9,438원 × 8시간 = 75,504원
- 평균임금: 3개월 급여총액(기본급) + 고정수당(급량비) + 상여금
(5,548,820원 + 200,000원 + 150,000원[상여금600,000원3/12]=5,898,820원)
(5,898,820 ÷ 91일 = 64,822원)

[7월분 급여지급분]

성명	7월급여 지급분(A)	정당지급분(B)	환수금액	비고
■■■■■	976,640원	558,130원	418,510원	

※ 7월 정당 급여 지급분 계산식

- [급여액(기본급) + 고정수당(급량비)] × 9일 ÷ 31일
[1,822,480원 + 100,000원] × 9일 ÷ 31일 = 558,130원

○ 또한, 해당 보조사업의 사업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
■■■■■ 운영지원」 지방보조금 정산결과를
2020. 3. 10.일 검토 보고하면서 실제 근무년수 1년 미만인 동 “단체”

상근직원인 ■■■■■ “■■■■■”에게 1,745,150원의 퇴직금을 착오로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적정 여부” 및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여부” 항목란에 당초 계획(목적)대로 추진 및 적정 감사의견으로 정산 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년도(2020년도 및 2021년도)의 정산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의 적정 유무를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자치행정과장은

- 과다하게 지급된 임금 418,510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여 주시고, 퇴직금 지급 시 과소 지급분 208,950원에 대해서는 추급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 또한 앞으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보조사업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민간단체 차량 구입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부적정

【부 서 명】 사회복지과

【행 정 상】 시 정, 주 의

【재 정 상】 회 수

【지적내용】

가. 현 황

■ 2021. [REDACTED] 차량구입

○ 보조사업명: 2021. [REDACTED] 차량구입

○ 보조사업자: [REDACTED]

○ 보조금 교부결정액: 40,500,000원

- 산출내역: 카니발9인승 자가용 2.2디젤 노블레스 기본형 40,500,000원

○ 사업추진현황

- 2021. 01. 05. 2021년 차량 구입 보조금 지원계획 알림(시→보조사업자)

- 2021. 01. 2021년 보조금(차량구입) 교부 신청(보조사업자→시) *미접수

- 2021. 01. 19. 2021년 차량구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결의(시)

- 2021. 01. 22. 2021년 차량구입 보조금 지급 알림(시→보조사업자)

- 2021. 02. 2021년도 보조금(차량구입)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시) *미접수

- 2022. 04. 25. 보조금 정산검사 보고(시)

○ 2021년 [REDACTED] 차량 구입 보조금 정산 내역 【표1】

지출일자	집행내역	집행액(원)	비고
	계	40,453,470	
2021.02.04.	차량구입비	37,159,580	
2021.02.04.	차량구입취득세	2,352,000	
2021.02.09.	번호판제작비, 수수료	99,890	
2021.02.09.	택송료 및 송금수수료	142,000	
2021.02.23.	차량보험료일부	700,000	운영비 통장으로 이체

※ 집행잔액 46,530원 반납

■ 2021. [redacted] 운영비

- 보조사업명: 2021. [redacted] 운영비
- 보조사업자: [redacted]
- 보조금 교부결정액: 12,500,000원
 - 2021. 01. 13. 2021년 운영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보조사업자→시)
 - 2021. 01. 14. 2021년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교부결정(시)
 - 2021. 06. 02. 2021년 지방비 보조금 변경교부 신청(보조사업자→시)
 - 2021. 06. 14. 2021년 [redacted] 운영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시)

구분	교부신청액(원)	변경내역
변경전	10,000,000	- 선양활동비 500,000원(추가)
변경후	12,500,000	- 차량관리비 500,000원⇒2,500,000원(유류비, 보험료 등)

- 2022. 03. 03. 운영 보조금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시)

* 총집행액: 13,007,580원(자부담 포함)

- 2022. 04. 25. 보조금 정산검사 보고(시)

○ 2021년 [redacted] 운영비(차량관리비(목)) 정산 내역 【표2】

지출일자	집행내역	집행액(원)	비고
계		2,206,900	
2021.02.08.	차량보험료	1,052,590	전액 운영비 납부 정산
2021.02.20.	차량유류대	74,000	
2021.04.20.	차량유류대	72,744	
2021.05.07.	차량관리비	14,000	
2021.05.29.	차량유류대	88,000	
2021.06.01.	차량 발매트 구입	200,000	
2021.06.11.	차량 하이패스 발급비	105,000	
2021.07.06.	차량 자동차세	225,660	
2021.07.15.	차량 유류대	91,000	
2021.09.16.	차량 유류대	95,008	
2021.10.27.	차량 유류대	90,000	
2021.11.16.	차량 유류대	97,898	

나. 위법·부당사항

(1) 민간자본사업보조 차량 구입 보조금 정산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2021. [redacted] 차량구입 【보조금교부결정서】
나. 용도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항목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021. [redacted] 차량구입 【보조금교부결정서】
아.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항목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사업의 전부·일부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허위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중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그럼에도 [redacted]에서는 교부결정된 민간자본사업보조(금)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구입 후 잔액으로 운영비에 편성·집행되어야 할 취득세·택송료·수수료 및 보험료(일부) 등의 경상적 경비를 【표1】과 같이 집행 및 정산 보고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적정”으로 정산 완료한 사실이 있다.

- 또한 2021년도 [redacted] 차량구입에 따른 차량 보험료를 집행하면서 【표1】과 같이 2021.02.23. “차량 구입 보조금”으로 일부(700,000원, 운영비 통장으로 이체) 지출한 것으로 정산 보고 하였음에도 【표2】와 같이 2021.02.08. “운영비 보조금”에서 전액(1,058,590원, 차량 구입 보조금으로부터 입금된 사항 미작성)지출 정산 보고하는 등 같은 내역으로 중복 정산 보고 하였음에도 회수 등의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적정” :으로 정산 완료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감독 소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취득현황 보고 및 매년 반기별로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법 제2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 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 그럼에도 사회복지과에서는 [redacted] [redacted]에서 지방

1) 1.부동산과 그 중물, 2.선박·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중물, 3.항공기, 4.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보조금으로 2021년 2월 차량 취득 후 감사일 현재까지 중요재산 취득 및 변동현황을 보고하지 않고 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중요재산 현황의 확인 및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보조금 교부 관련 문서 접수 소홀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에 의하면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에 의하면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 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사회복지과에서는 2021년도 [REDACTED] 차량 구입을 위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보고 문서에 대하여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 번호 기재를 통한 접수 처리를 하여야 하나,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 접수 처리하지 않는 등 공공기록물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사회복지과장은

- 부적정하게 정산 보고된 2021년 [REDACTED] 운영비에 대하여 재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 아울러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취득 및 변동 현황을 적기에 보고하도록 하여 중요재산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된 문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접수하여 문서대장에 등록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 관리 업무를 숙지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redacted] 보조금 식비 집행 부적정

【부 서 명】 농촌자원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보조사업 현황 【표1】

(단위: 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비			비고
		계	시비	자부담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47,500,000	47,500,000	-	

○ 식비 초과 지출 내역 【표2】

(단위: 원)

지출일자	지급처	결제금액	식비 초과내역	비고
합계	3건	2,224,000	1,432,000원 초과 집행	참석자 : 수강생 33명
2019. 7. 16.	[redacted]	1,326,000	1,062,000원 초과 집행	
2019. 7. 17.	[redacted]	513,000	249,000원 초과 집행	
2019. 7. 17.	[redacted]	385,000	121,000원 초과 집행	

나. 위법·부당사항

○ 구「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따르면 지방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수행 상황 점검) 및 제12조(정산검사)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 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편성기준표에 따르면 식비는 1인 1식 8,000원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농촌자원과에서는 【표2】 식비 초과 지출 내역과 같이 보조사업자인 [redacted]에서 [redacted]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식비 초과 지출 3건에 대해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정산 완료[농촌자원과 [redacted]회]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농촌자원과장은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 지원사업 수입금 처리 업무 소홀

【부 서 명】 문화예술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보조사업 현황 【표1】

(단위: 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비			비고
		계	시비	자부담	
[] 지원사업	[]	5,700,000	5,700,000	-	

○ 수입금 및 사용 내역 【표2】

(단위: 원)

수입목	수입금액	지출금액	사용 내역	비고
참가비	780,000	780,000	-버스임차비 : 550,000 -식비 및 다과비 : 230,000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거나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수익금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의 성명·상호와 주소 및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 기초, 경비의 사용방법, 지방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계획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문화예술과(당시 문화관광과)에서는 【표2】 수입금 및 사용 내역과 같이 보조사업자인 [REDACTED]에서 [REDACTED]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입금 발생이 예측됨에 따라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하나 미제출**하였고, 해당 수입금을 임의 사용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정산 완료[문화관광과-[REDACTED]호]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문화예술과장은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보조사업자의 수입금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 지원사업 강사료

원천징수 미실시

【부 서 명】 아동보육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강사료 원천징수 미실시 내역 【표1】

(단위: 원)

사업명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보조사업자	지출금액	비고
[] [] 지원	[]	2019. 7. ~ 8.	[] []	480,000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고,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21조(기타소득),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127조(원천징수 의무), 제129조(원천징수 세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기타 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의하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급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에서 2019. 1월부터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아동보육과(당시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표1】 강사료 원천징수 미 실시 내역과 같이 강사료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정산 완료[아동보육과 회]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아동보육과장은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redacted] 지원사업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소홀

【부 서 명】 아동보육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범죄 전력 미조회 현황 【표1】

사업명	프로그램명	운영 기간	보조사업자	범죄 전력 조회 여부	비고
[redacted]	[redacted]	2019. 6. ~ 12.	[redacted]	부	
[redacted] 지원	[redacted]	2019. 8. ~ 9.	[redacted]	부	

나. 위법·부당사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 제한을 받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 등 관련자를 채용할 시에는 채용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한 후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아동보육과(당시 여성가족과)에서는 【표1】 범죄 전력 미조회 현황과 같이 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정산 완료[아동보육과- 호]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아동보육과장은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